# 강제징용 생존자들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

**1532개 시민사회 등 시국선언**
**제3자 변제안 규탄… "2차 가해"**
**양금덕 "그런 돈 죽어도 안 받아"**
**주말 규탄 집회·범국민 대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과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유린당한 일제 피해자들을 불우이웃 취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비상 시국선언을 통해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 문서 한 장 없는 이 희한한 해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소송은커녕 고국 땅조차 밟지 못한 채 억울하게 구천을 떠돌고 있을 수많은 일제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정의기억연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등 1532개 시민사회단체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함세웅 신부, 신경림·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를 비롯한 96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선 철회를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우리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며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생을 했느냐. 일본에 가서 고생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할머니는 "힘을 합쳐서 윤석열(대통령에게) 퇴장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무슨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한다고 하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도 "정신대에 끌려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 보내주고 일하면 월급도 준다고 꼬셔서 (일본에) 데려가서 평생 골병이 들게 만들어놨다"며 "지금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등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도 정부 배상안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 배상 결정에 대해 "해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는 모욕을 느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과거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순간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 정부는 똑똑히 들으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일본의 대통령이냐고 국민이 묻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수십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한다',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전범기업 미쓰비시 사죄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해법 무효 범국민 대회'를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日 언론 "윤 대통령·기시다, 16~17일 정상회담"

**대통령실 "확정 안돼…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4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은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도 "이번 (강제징용) 해결책을 근거로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 후반 윤 대통령과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실시할 수 있을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2011년 이후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고 간게 중단된지 12년째인 만큼 이 문제를 양국이 주시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날짜를 확정한 건 없다. 논의를 해나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비명계, 李 대표 기소시 집단행동 '촉각'

**'당헌 80조' 적용 놓고 논의**
**지도부 "李, 해당 안된다"**

더불어민주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집단 행동을 본격화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달 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담고 있는 '당헌 80조' 적용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 인사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7일 만찬 모임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당 안팎의 상황과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기소되는 시점에서, '당헌 80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있다. 다만 제3항을 통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당헌 80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당 지도부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하면서, 당헌 80조에 따른 대표직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 비명계의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표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도) 해법 중 하나다.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정무직 당직자들, 사무총장이나 전략기획위원장 등 여러 당직이 완전히 (친명) 일색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은 8일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힘, 오늘 전대서 당 대표 선출… 결선투표 여부 주목

**최종 투표율 55.1% '역대 최고'**

국민의힘은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다.

당 대표 후보 선거의 경우, 이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앞서 3·8 전당대회 투표는 7일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부터 나흘 동안 모바일과 ARS 투표를 진행했다.

최종 투표율은 55.1%(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은 45.36%였다.

나흘 동안 집계된 득표 수는 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된다.

한편 이날 안철수·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며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

**민주 "특검 반드시 관철"**

정의당은 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에 대한 직접적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에 항의방문했다.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불응한 건지도 모른다는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있던 검찰은 어디로 간건가.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대통령실,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이 아닌지,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과)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며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길 바라며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윤영덕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침묵 규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저지대응단 소속인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TF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올해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에게 당당히 원전 오염수의 안전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따를 게 아니라,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오염수 검증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상 잠정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